

# KMI 동향분석

**VOL.155**

2019 NOVEMBER

발간년월 2019년 11월(통권 제155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정아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2019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내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13.5% 감소한 7,158만 명으로 나타났다. 바닷가를 방문하는 목적도 먹거리 체험이나 해양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여름휴가’에 대한 의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대체 공휴일 도입,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이제 휴가는 ‘여름휴가’가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해수욕장의 연중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바닷가 이용행태는 더욱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여름철 휴가 분산, 바닷가 방문 목적 다변화 등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연중 해수욕장 이용 허용으로 4계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는 최근 10년(2009~2018)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수욕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55명인데, 이 중 안전 부주의, 음주 수영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가 집중되고, 폐장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의 안전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지자체, 경찰 외에 해수욕장 협의회, 민간 인명구조 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규제보다 자율적인 질서 유지,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이안류 대응 정보지 배포,

---

안전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해수욕장 이용 매너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인명구조단체와 협력하여 기초 수상레저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 스스로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호주는 지자체와 함께 호주서핑인명구조대(Surf Life Saving Australia, SLSA), 호주왕립인명구조협회(Royal Lifesaving Society Australia, RLSA)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해수욕장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해수욕장 활동 표시, 구조 차트, 이안류·쓰나미 등 발생 시 요령사항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학교 정규 프로그램 내 인명구조, 안전교육, 수영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유년기부터 친수문화를 제고하고, 수상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체계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레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해수욕장 조례에 개장과 폐장기간 안전관리 방안을 명시하여 폐장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항목과 범위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입수통제, 유영구역과 관련된 표준화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해수욕장의 이용 상태 및 안전관리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지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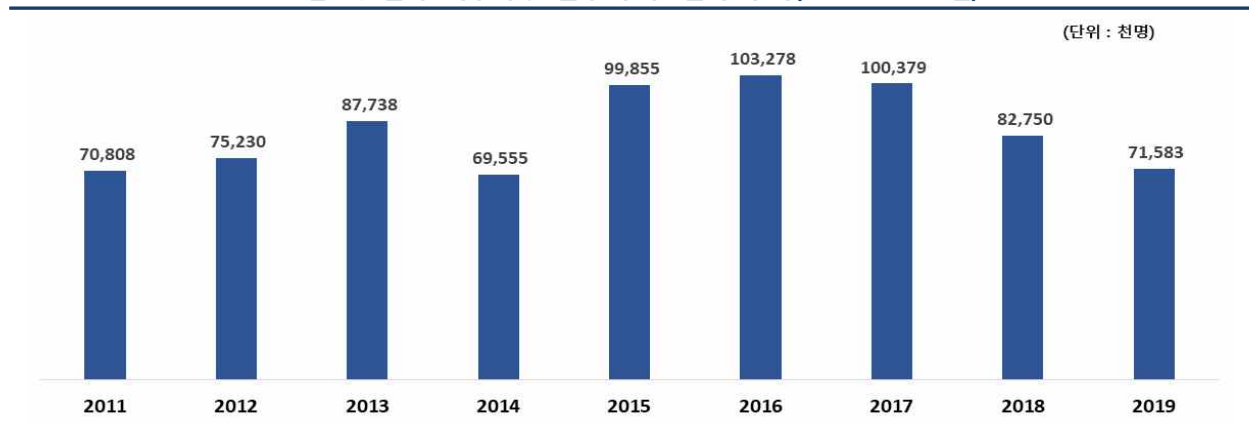
### ■ 올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

-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여름철 휴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1)</sup>
- 우리나라는 그간 여름철 휴가 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관광사업체의 성수기·비수기 문제, 바가지 요금, 교통체증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휴가 분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주 52시간 근무제와 대체 공휴일 도입,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서 이제는 휴가도 ‘여름휴가’가 아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휴가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이유와 함께 여름철 국내 대표 관광목적지인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2)</sup>

### ■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수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19년 국내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13.5% 감소한 7,158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2016년 1억 300만 명을 기점으로 지난 3년 동안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전국 해수욕장 관광객 수 변화 추이(2011~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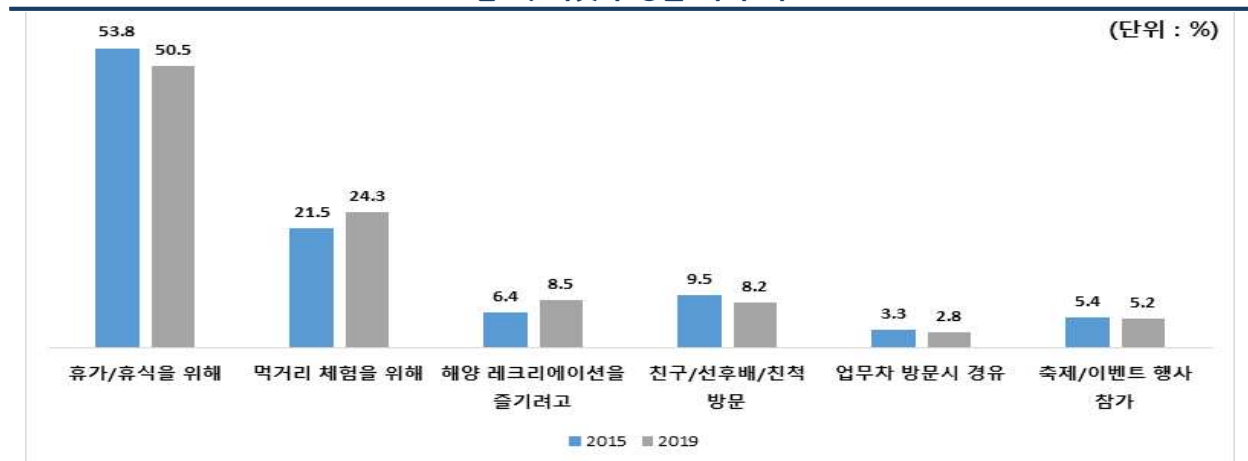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6.28.).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은?

2) 국내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6월~8월 사이로 한정하여 산출하고 있음

- 2018년 9월에서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휴가/휴식’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먹거리 체험, 해양레크리에이션, 친구/친척 방문 등을 위해 바닷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과 2019년의 바닷가 방문 목적을 비교해보면 휴가/휴식은 감소하였지만 먹거리 체험, 해양레크리에이션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닷가를 찾는 목적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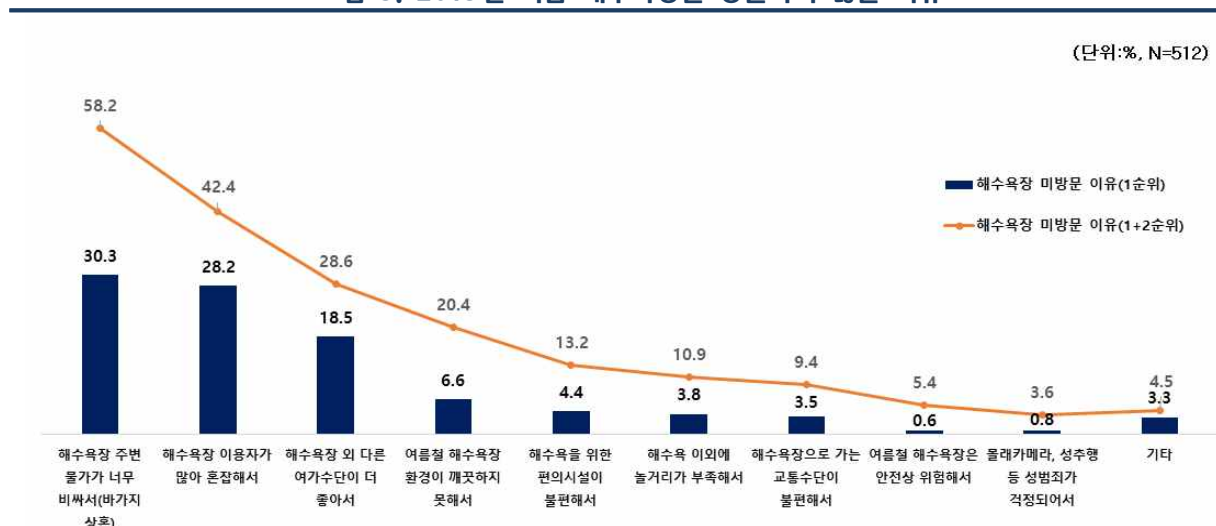
그림 2. 바닷가 방문 목적 비교



자료 : 국토해양부(2011),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관광 자체실태 조사(2018년 9월~2019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2019년 여름 해수욕장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성수기 해수욕장 주변 물가 상승과 해수욕장 혼잡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휴가 분산 제도를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름철 해수욕장 성수기에 대한 문제점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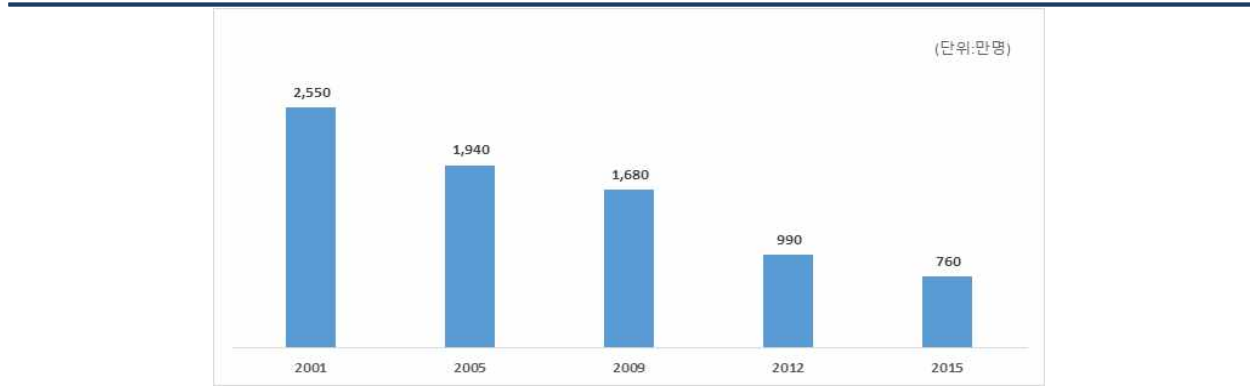
그림 3. 2019년 여름 해수욕장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수욕장 실태 자체조사 결과, 2019(내부자료)

- 이러한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현상은 우리나라와 해양공간 및 해양레저관광활동 여건이 유사한 일본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일본은 2001년 2,550만 명이던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2015년 7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해양레저관광활동 다변화와 개별 레저 활동에 대한 선호가 변화의 원인으로 분석됨

그림 4. 일본 해수욕장 방문객 변화 추이



자료 : 일본 레저백서 각 년도 인용 재작성

##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 ■ 최근 10년간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는 감소 후 증가 추세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는 201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전년 대비 50% 증가한 이후 매년 평균 약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 중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는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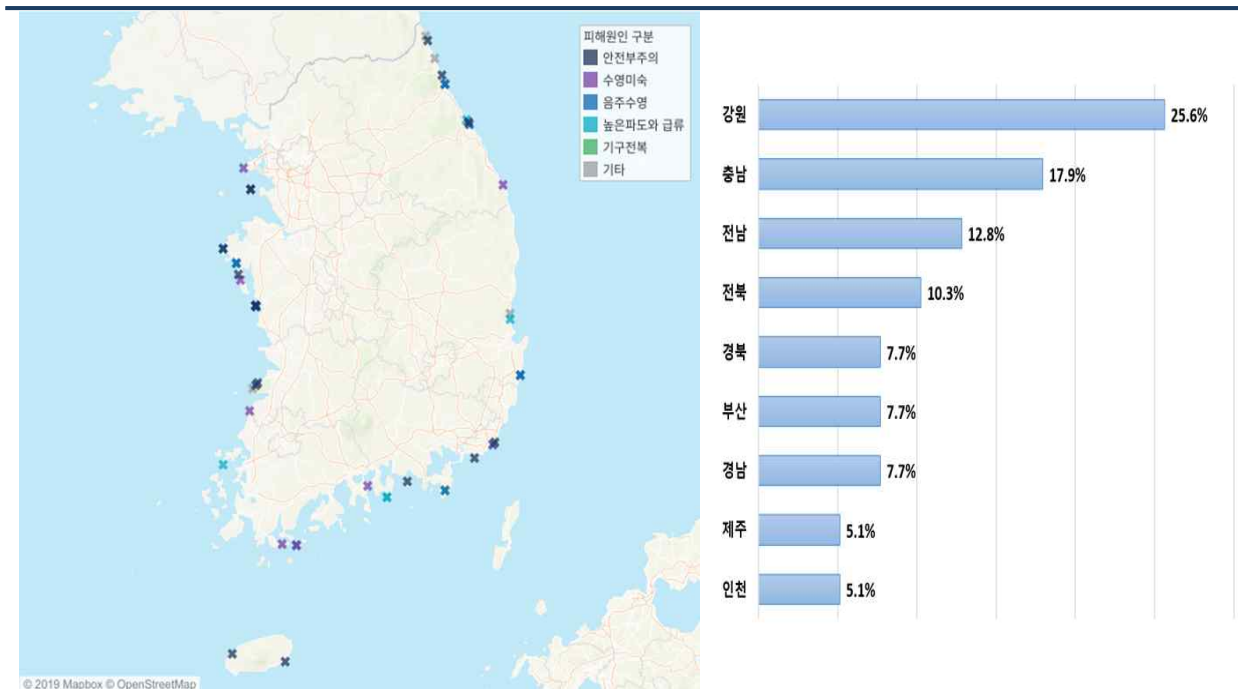
그림 5.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수 추이 및 물놀이 사망사고 원인(2009~2019)



자료: (좌)행정안전부 물놀이 사망자 현황 각 년도 보도자료 및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참고하여 작성, (우)여름철 물놀이 사고 지도, <http://dj.kbs.co.kr/resources/2019-06-22/>을 바탕으로 재구성 (검색일 : 2019.10.24.)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총 55명으로,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부주의로 인해 사망한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수영이 21.8%, 높은 파도 및 급류가 20.0%, 수영 마숙이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동·서·남 해역별로 고르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과 충남,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음

그림 6.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지역 분포 현황(2009~2018)



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 55명 중 사고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39명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여름철 물놀이 사고 지도, <http://dj.kbs.co.kr/resources/2019-06-22/> (검색일 : 2019.10.24.)

## ■ 국내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개장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실시

- 국내 해수욕장은 대부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개장하며, 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경찰 등과 협력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를 배치하고, 물놀이구역 및 해양레저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이 철수하고, 별도의 수난구조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임시안전요원 또는 지역 주민들이 순찰을 돌거나 수영금지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입수금지 홍보방송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실정임



- 특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해수욕장을 연중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

그림 7.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사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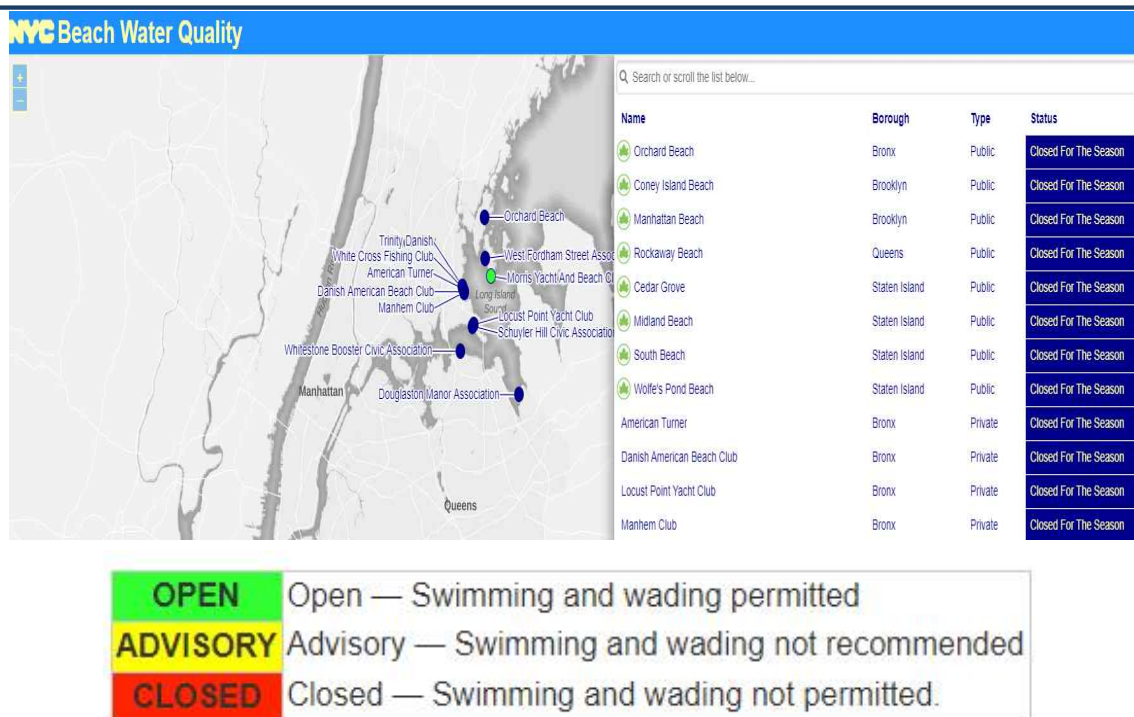
자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0119272670020>; <http://www.knn.co.kr/1938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187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187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s://www.ytn.co.kr/\\_ln/0115\\_201908220042402024](https://www.ytn.co.kr/_ln/0115_20190822004240202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5/2019082590092.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5/2019082590092.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3398&plink=ORI](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3398&plink=ORI) (검색일 : 2019.10.24.)

## ■ 폐장 기간 이후의 해수욕장 이용에 따른 세부 안전관리 지침 필요

- 연중 해수욕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법이 개정되었지만 기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체제는 개장기간에 집중되고 폐장기간 안전관리 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음
- 4계절 해수욕을 허용하는 해수욕장법 개정 이전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폐장기간에도 해수욕 활동, 물놀이, 서핑 등이 해수욕장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나 기상악화에 따른 입수제한 조치 외에 특별한 제재나 폐장기간 입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편 국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관리조례에는 관리와 운영, 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제, 개장기간 등이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폐장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해수욕장 관리방안,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요원 배치나 안전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만 폐장 후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요원 파견이나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 미국 뉴욕 주 공원관리사무소의 해수욕장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25개 해수욕장 운영상황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에 따라 녹색과 노란색,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음
- 개장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되며, 이 기간 동안 안전요원이 없는 구역에서는 해수욕이 금지됨. 그러나 폐장 후에는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전사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 8. 미국 뉴욕주의 해수욕장 이용정보 안내(공공/민간해수욕장)



자료: <https://maps.nyc.gov/beach> ; <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beach-homepage.page>(검색일 : 2019.10.24.)

## 호주·일본,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행

### ■ 호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시

- 호주는 지자체와 호주서핑인명구조대(Surf Life Saving Australia, SLSA), 호주왕립인명구조협회(Royal Lifesaving Society Australia, RLSA)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해수욕장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SLSA는 호주 최대의 인명구조원 교육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하는 민간단체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활동 표시, 구조 차트, 이안류·쓰나미 등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개발하여 호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RLSA는 해안을 담당하는 SLSA와 함께 내수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세계적인 수준의 인명구조원 프로그램을 특화 개발하고 있음. 특히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명구조, 응급처치, 수상안전, 수영기술 등을 포함하여 유년기부터 친수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하여 수상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림 9. 호주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비영리 민간단체



자료 : (좌)<https://sls.com.au/coastal-safety>, (우)<https://www.royallifesaving.com.au> (검색일 : 2019.5.27.)

## ■ 일본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 일본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지역 해수욕장 조합이 영업과 관리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구상과 홍보, 해수욕장 이용객 서비스를 제공함.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구조팀, 해수욕장 협의회 등 유관 단체가 협력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인명구조연맹은 해수욕장을 순회하며 ‘해수욕장 이용 매너 업무’ 캠페인을 추진함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자체는 해수욕장 방문객 증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해수욕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놀이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조합과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그 외 물놀이 금지구역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므로 규제보다 자율적인 질서 유지와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해수욕장에 이안류 대응 정보지 배포, 안전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해수욕장 이용 매너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인명구조단체와

기초 수상레저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한 해양레저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그림 10. 일본의 민간 수상레저안전교육단체



자료 : (좌) <http://biid.jp/business/education/>, (우) [https://iwanuma.myswan.ed.jp/blogs/blog\\_entries/index/58/limit:20?frame\\_id=111](https://iwanuma.myswan.ed.jp/blogs/blog_entries/index/58/limit:20?frame_id=111) (검색일 : 2019.10.24.)

## 해수욕장 이용문화와 안전관리 여건 개선

### ■ 해수욕장의 연간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제도 개편 필요

- 해수욕장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잠재수요는 개장 기간 외에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한편 당일형 관광객 증가, 개별여행 선호 및 해양레저관광활동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수욕장 이용객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해수욕장의 연중 이용체제에 대비한 안전관리는 관리 인력의 상시배치나 배치인력 수 확보 정책보다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인식에 대한 홍보와 친수문화 확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해수욕장 내 사망사고 원인 중 안전부주의나 음주수영의 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안전관리는 이용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수욕장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관리조례에 개장 및 폐장기간의 안전관리 방안을 명시하고 개장기간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이와 함께 해수욕장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하여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레저관광활동을 즐겨야함.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안전체험교실이나 해양레저체험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표준화된 홍보물 제작·보급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기반 정비

- 국내 해수욕장의 안전시설물이나 안내표지판은 지역 또는 해수욕장에 따라 상이하며 해수욕장 이용객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따라서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수질에 따른 입수통제, 유영구역 등에 대한 표준화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함

- 해수욕장 이용안내 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해수욕장 이용 여건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과 배치되지 않은 해수욕장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포털 등으로 제공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전관리 상태를 인지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체계에 대한 정보를 해수욕장 안내 표지판에 게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림 11. 국내 해수욕장 수영금지 안내표시 깃발



자료 : [www.mk.co.kr/news/photo/view/2017/08/516229](http://www.mk.co.kr/news/photo/view/2017/08/516229); <http://news.zum.com/articles/3991578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292023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7292023001); <https://nkin.tistory.com/873>(검색일 : 2019.10.24.)

그림 12. 해외 해수욕장 수영 안내표시 깃발



자료 : <https://www.safe4spring.com/water-safety>; [www.southerngoldcoast.com.au/iconic-surf-beaches](http://www.southerngoldcoast.com.au/iconic-surf-beaches); [www.breakersfwb.com/island-blog/floridas-beach-warning-flag-meanings/](http://www.breakersfwb.com/island-blog/floridas-beach-warning-flag-meanings/); <https://insiderguides.com.au/beach-safety/>(검색일 : 2019.10.24.)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구분	제목	발간일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구분	제목	발간일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구분	제목	발간일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간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환갑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중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유통우려증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플랫폼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6.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잠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다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상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URL: <https://www.kmi.re.kr/>